

신민당 헌법 개정 시안 검토

1985. 10.28.

정 책 조 정 실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be '정세민' (Jeong Se-min), is written in the bottom right corner. Below the signature, the date '11/5' is written.

## 신민당 헌법개정 시안 검토

### 1. 주요 내용

#### 가. 전 문

- "4.19 의 민주이념"을 삽입하고 "제 5공화국" 대신 "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"을 규정
- 명확적 정권교체를 위하여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을 개정한다고 규정.

#### 나. 총 칙

- 정당 운영자금 국가부담 의무화 (안 제 7조 제 3항)
- 정당 해산권을 헌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 이관(안 제 7조 제 4항)
- 군인의 정치 개입 금지 조항 신설 (안 제 4조 제 2항)
- 공무원의 재산 공개 조항 신설 (안 제 6조 제 3항)

#### 다. 국민의 권리의무

-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인정 (안 제 8조)
- 공무원 선거권 연령의 인하 (20세 — 18세) (안 제 22조)
-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,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원칙적으로 '불인정' (안 제 18조 제 2항)
- 군법회의의 재판 관할 축소 (간첩죄를 제외한 군사기밀에 관한 죄, 군용물, 군사시설에 관한 죄등 제외)  
(안 제 24조 제 2항 또는 제 25조 제 2항)

- 대통령외 법원의 권한에 대한 비상조치권 삭제  
(안 제 26조 제 2항)
  -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유보 조항 삭제 (안 제 30조 제 1항)
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익사업체, 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종사자의 단결권,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 (안 제 30조)
  - 사회보장 예산의 매년 계상 의무화 (안 제 31조 제 2항)
  -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권 제한 규정 삭제(헌법 제 35조 제 2항)  
(질서유지, 공공복리의 경우만 인정)
- \* 다른안은 현행 유지

## 라. 정 부

### (1) 대통령

- 대통령의 국가연수 불인정(행정권의 수반)
- 부통령제 신설
- 대통령, 부통령 직선제 채택
- 대통령, 부통령 임기 4년
-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
-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대신 재정, 경제상의 긴급 처분권, 긴급명령권 인정
- 국회해산권 불인정
- 국회 정기회에 예산안 제출시 대통령 출석의무 규정 신설
- 대통령의 영업 종사 금지
- 전직대통령 예우 규정 삭제

(2) 행정부

-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이던 것을 의결기관으로 함.
-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 폐지
- 국정 자문회의 폐지

(위헌쟁쟁강제)

(3) 감사원

- 감사원을 심계원으로 개편
- 감찰권 삭제하고 회계감사에 한정
- 심계원장과 심계관의 신분보장 규정 신설  
(현행은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음)

마. 국회

- 국회의원의 정수 (200인 이상) 에 관한 규정 삭제
- 비례대표제 폐지
- 임시회 집회 요건 완화(국회의원 1/3 -- 1/4)
- 정기회의 회기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
- 국정 조사권외에 국정 감사권 신설
- 탄핵 심판위원회제 신설(현행은 헌법위원회에서 탄핵 심사)  
- 위원장은 대법원장, 위원은 대법원판사 4인, 국회의원 4인

바. 법원

- 대법원의 법관을 20인 이하로 제한(현행 법원조직법: 13인)
- 법관 임명제도 변경
  - 대법원장: 법관 추천회의에서 선출, 대통령이 임명
  - 대법원 판사: 법관 추천회의 동의, 대법원장 제청, 대통령 임명
  - 일반법관: 대법원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

- 법관 추천 회의 제도 신설
-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기 연장 (5년 → 6년)
-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권 이관(헌법위원회 → 대법원)

#### 사. 헌법위원회

- 폐지

#### 아. 경 제

- 국토와 자원의 국가보호, 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자문 기구 규정 삭제
-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치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 신설

#### 자. 헌법 개정

- 헌법 개정의 대통령 제안권 삭제
- 대통령의 임기 연장등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 삭제
-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폐지(국회재적 2/3 찬성으로 확정)

#### 차. 부 취

- 기존 헌법질서를 부인하고 이 헌법 개정으로 모든 헌정질서를 새롭게 정비'
- 지방자치제는 이 개정헌법에 의한 대통령 취임후 1년 이내 실시

2)

특 징

- 제 5공화국 정통성을 부인 ( 기존 헌정질서 부인)
- 대통령 직선제 채택 ( 대통령 임기 4년 1차중임 가능)
- 대통령 권한 축소
- 부통령제 신설
- 국회의 국정 감사권
- 정당 해산권,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권등의 대법원 권한으로 일원화
- 대법원장의 선출제 채택
  - 법관 추천 회의
- 헌법위원회, 국정자문회의,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폐지

3. 검토 의견

- 헌법의 상당한 부분을 개정하였으나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대하여는 크게 달라진바 없고 주로 권력구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
- 기존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제 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.
- 과거에 실패했던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헌법을 개악시키려 하고 있음.
- 신민당 내의 세력구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려는 거임.
- 국가안보와 국법 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음.

김대중 - 대통령  
 이인우 - 부총장  
 김홍식 - 국무총리